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6호 소개

□ 헌법판례동향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장애인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규정의 위헌성’ 사건은 잠정적인 시한을 넘어서는 기간 동안 후견인이 선임된 사람과 형사법전 상의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상태에서 자행한 행위로 인해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연방선거법에 따라 청구인들을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한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과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에 반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국적 상실에 관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터키 국적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 국적을 취득한 청구인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국적의 상실을 확인한 행정법원의 결정이 법적 상황에 대한 오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직권조사의무를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비노동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의 위헌성’ 사건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도 단체교섭 비용을 징수하는 법률 규정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의 가입은 강제하지 않지만 비용은 강제로 징수하는 에이전시 스톱(agency shop) 제도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던 Abood(1977) 판결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Abood 판결 자체의 논거와 대안적 논거들이 적절하지 않으며, Abood 판결이 선례구속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Abood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5년 이상 해외거주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

의 위헌성' 사건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은 연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캐나다 선거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선거권이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권리이고, 거주요건은 선거권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며, 이동과 통신이 발달한 세계화된 오늘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헌장 제1조의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공직선거법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2004헌마644 사건 및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2009헌마256 사건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 사건은 일정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조작에 대처하는 것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거짓 정보의 개념에는 견해, 풍자, 부분적인 부정확함 및 단순한 과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정적 해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의 배포방법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해석을 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브라질 사법제도, 캐나다 사법제도 및 그리스 특별대법원을 소개하였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9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미국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진료소 숫자 제한법에 대한 집행정지명령’은 루이지애나주 내의 낙태진료소의 숫자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시적 집행정지명령을 내린 상황을 소개한 글입니다.